

제403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23일(목)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6)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8)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7)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2)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8)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7)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9)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4)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2)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9)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1)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1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1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4)
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6)
2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4)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4)
2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5)
2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8)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3)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1)
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8)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7)
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7)
2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2)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3)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0)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3)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2)
3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7)
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2)
3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5)
37. 업무보고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 4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6) … 4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8) … 4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7) … 4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2) … 4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8) … 4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7) … 4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9) … 4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4) … 4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2) … 4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9) … 4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1) … 4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 4
1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 4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 4
1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6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4) … 6
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6) … 6
2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4) … 6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4) … 6
2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5) … 6
2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8) … 6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3) … 6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1) … 7
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8) … 7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7)	7
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7)	7
2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2)	7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3)	7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0)	7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3) ...	7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2)	7
3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7)	7
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2)	7
3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5)	7
37. 업무보고	7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4시35분 개의)

○위원장 권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입법심의관입니다.

(인사)

심의관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의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3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소외된 가족에게도 국가의 돌봄이 미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작년 9월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충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예산을 173억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국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인 아이와 청소년부모를 가진 아이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22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올해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여전한 젠더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지원해야 함에도 아직도 부처 폐지를 주장하는 등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개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

번복은 참담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주도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가 위축되고 역할을 방기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를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성폭력 대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부처가 꼭 필요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공식적으로 세계 유례없는 0.7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양육과 육아 환경, 가족 문화, 여성 일자리 등 성평등 관련한 변화가 시급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현 정부는 그 대안이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조차 없애는 상식 밖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여성가족위원회 출장에서 프랑스는 저출생 관련 성평등 의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혐오와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성·가족·청소년·성평등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함께 지혜를 모아 가는 2023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개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서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6)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8)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7)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2)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8)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7)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9)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4)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2)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9)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1)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1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14시39분)

○위원장 권인숙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정경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법안심사소위원장 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2월 14일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부모 입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보의 제공·연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주혜·김민기·김병욱·인재근·권인숙·이종성·홍석준·김영진·최혜영·조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되 전주혜 의원안은 일부 내용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 하였습니다.

둘째,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신상정보 고지명령 집행을 현행 우편 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 및 다른 법률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과

법적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것으로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정경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애써 주신 정경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1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7분)

○위원장 권인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사항,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4)

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6)

2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4)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4)

2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5)

2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8)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3)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1)
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8)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7)
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7)
2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2)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3)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0)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3)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2)
3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7)
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2)
3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5)

(14시49분)

○위원장 권인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컴퓨터 단말기상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회의 시작 시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관련한 대체토론은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이 끝나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7.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4시50분)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공공기관은 기관의 대표께서 인사를 하시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스톡홀름 피해자보호법 제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학교 안팎 청소년과 고위기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경력단절 예방사업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저성장 극복을 위한 여성·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해 증가하는 1인 가구, 은퇴한 중장년층,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아우르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구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기간을 늘리는 한편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양성교육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적응, 진로 설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키우고 더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를 통해 교육과 활동이 어우러지는 더 넓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와 디지털 기반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글로벌·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8월에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을 위한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임상심리사, 청소년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도박, 마약류, 룸카페 등 새로운 청소년 유해환경에도 적극 대응하여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대 폭력 피해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만들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확대하여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스톡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여 올 7월 스톡킹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보완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열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8개 부처 양성평등 전담 부서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을 제고하겠습니다. UN Women 성평등센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등을 통해 여성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여성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이하여 여성가족부는 국민과의 따뜻한 동행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권인숙 위원장, 유정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귀 기울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순 차관입니다.

황윤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최성지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조민경 대변인입니다.

김가로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권영 청소년정책관입니다.

김숙자 가족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입니다.

변주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주 수고하셨습니다.

상세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기관장께서는 인사만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 정경희·유정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양평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원은 2023년에도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과 동행하며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과 정책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공공부문 성인지정책 기획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성평등정책 실현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통합형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업무 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등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사이버교육 운영 및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비롯하여 성별 균형 및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양평원의 제반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등 제반 국정과제 수행은 물론 부처에서 계획하는 청소년정책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청소년 환경 변화에 맞는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 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활성화,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주도 활동 확산, 청소년 맞춤형 체험활동 확대, 청소년 활동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중심에 있는 청소년 활동 서비스 제공 사업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균형 성장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격차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청소년들이 참여를 보장받고 돌봄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활동 현장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도 관리를 강화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은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기관 경영과 사업 운영 방식을 구성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온전하게 누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의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총괄 지원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정주 간사, 권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올해는 고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광역형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모형 보급과 임상심리사 신규 배치 지원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기청소년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안전망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기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올해도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금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본원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위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 관리 및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과 가족위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맞춰 가족서비스 데이터 수집, 난임가족 상담, 1인 가구와 노인가족 지원 등 가족 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 해소를 위해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운영, 인식 개선 캠페인, 가족 차별 및 편견 모니터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콜센터 및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돌봄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컨설팅, 사업기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부와 함께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방안 모색 등 가족친화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강화된 제재 조치를 통해 2022년 기준 양육비 의무이행 2273건을 확정하고 실이행 1343건을 시행했으며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으로 작년 한 해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종합지원 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위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원가정 기능 회복 지원 사업을 전국 16개 가족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 등 사회적 재난 시 긴급 가족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 구축과 시범훈련, 광역별 전문가 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가족위기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화상 가족상담 시범운영 등 가족상담 방식과 범위를 확대하고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가족정책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주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직무대행 변주연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진흥원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중앙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폭력 유형별 분절적인 지원의 한계로 발생하는 피해자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폭력 방지 및 현장 지원 사업, 종사자 교육 사업을 통해 피해 지원 현장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제발 방지와 사건 대응 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국내외 유관 기관 협력 강화로 피해자 지원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며 일본 군 위안부 문제 조사·연구·홍보,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평화의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의사진행발언이나 그 밖의 발언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5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정경희 간사입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된 질의 시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의 여가위 질의 시간입니다. 작년 8월 결산 때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했습니다. 작년 9월 현안보고 때 주질의 5분 했습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부터는 원하는 위원님만 하시도록 했습니다. 작년 11월 예산 심의, 공청회, 상정 법안 대체토론 때는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만 질의하시도록 했습니다.

저와 유정주 간사가 이번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몇 회로 할지, 몇 분으로 할지 수차례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가위는 국회 내에서 겸임 상임위인데 질의 시간을 국정감사보다 길게 그리고 다른 기본 상임위보다 길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7분, 5분, 3분 이렇게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께 질의 시간에 대해 중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장님의 조정 건의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거부하시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앞으로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양당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 지금 정경희 간사께서 최근 여가위 질의 시간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그렇게 비교하자면 제21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모두 1차 질의 7분, 2차 질의 5분, 3차 질의 3분으로 질의 시간을 합의하였던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위원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간사의 임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에 부담을 가질 거다라는 것도 간사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계속 협의했으나 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지난한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질의 시간의 합의는 야당과 여당의 요구가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되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조건 없이 1차 질의 7분, 2차 5분, 3차 3분 또는 1차 7분, 2차 5분으로 합의하는 것을 제안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안한 안이 1차 7분 그리고 원하는 위원에 한해서만 2차 5분, 3차 3분이었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협의하는데 굳이 원하는 위원에 한해서만이라는 말이 이토록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나 단서를 달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회의 시간에 대해 큰 틀에서 간사 간 합의를 하고 질의를 할지 말지는 개별 위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 보충질의는 원하는 위원에 한해서라는 이 사소한 조건에 집착해서 질의 시간에 합의해 주지 않는 국민의힘 정경희 간사님에게 유감을 표명하고요.

위원장님, 최대한 자유롭게 질의 시간을 제한

하지 않고 위원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 보기 너무 민망하고요. 5분, 7분, 3분, 5분은 되고 7분은 안 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런 의사진행발언 할 시간에 그냥 질의를 시작해서 진행하면 될 텐데요. 지금 이런 논의를 가지고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많이 바쁘십니까? 바쁘시면 질의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질의할 게 있는 위원들의 질의 시간까지, 질의 기회까지 축소하자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가위 전체회의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열렸고 현안이 정말 많은데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경희 위원 제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그러면 이 발언까지만 하고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제가 질의 시간을 다른 기본 상임위보다 길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사실이 아니고 저희 당에서 마치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2020년 7월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있어요. 이게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당론 법안이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내 모든 상임위가 월 4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여가위를 점임하는 위원님들은 현실적으로 회의에 두 배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의원이 내신 이 법안에 여기 계신 민주당의 모든 위원님들 중에서 김한규 위원님 한 분만 빼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서명하셨습니다. 그 법안에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 법안에 질의 시간 짧게 하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오도하시면 안 되지요.

○정경희 위원 아니, 그게 여가위를 점임하는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발의를 했단니까요.

○이소영 위원 그래서 이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여는데요. 오도하지 마세요.

거기 질의 시간 짧게 하라고 있습니까?

○정경희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법안에 발의를 해 놓으려 놓고 나서……

○이소영 위원 논리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정경희 위원 제 발언 시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그 법안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나 이런 데보다 점임 상임위이니만큼 발언 시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 합의의 정신에서 여태까지 질의 시간을 양당 간사의 합의하에 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만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위원장님께 조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조정이 안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 사실관계가 달라요.

○위원장 권인숙 여기서 정리를 하지요.

○정경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됐습니다.

○유정주 위원 짧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최대한 열어 두는 것이 입법기관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열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희 위원 이중 잣대입니다.

○최승재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얻고 하게 하시고 회의 진행하시지요, 이제.

○위원장 권인숙 예.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재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봤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분, 5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할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지요.

○위성곤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1분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예, 그러시지요.

○위성곤 위원 질의 시간 가지고 간사님들 간에 이런 얘기 하는 게 국민들께 민망스럽습니다. 또한 간사는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는 분들이지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실 것을 간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회의를 하고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살펴야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5분이네, 7분이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말 민망스럽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장관께 지금까지 저는 질의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한 여가부 폐지가 아직도 되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여가부 수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비동의 간음죄가 어떤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장, 유정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성곤 위원 그런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해 왔던 게, 여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들어갔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도 필요성 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5년에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그 계획부터 꾸준히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의 2021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상담소 66곳에 접수되어진 1030명의 강간 피해 사례 중에 직접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753건, 71.4%라는 것이 발표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위성곤 위원 발표하셨는데 9시간 만에 그 발표를 문자로 철회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철회가 아니고요 개정

검토하겠다는 그 입장을,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자를 읽어 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개정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최종으로 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개정을 시작하는, 검토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서…… 개정 검토라는 것이 아주 즉각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필요 이후에 개정을 검토한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위성곤 위원 권성동 의원의 페이스북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반대 이것 때문에 철회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권성동 의원님의 폐지는 저희가 그 의견을 내기 전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교류를 했다거나 의견을 들은 적은 전혀 없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하고는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법무부의 입장과…… 그러니까 주무 부서지요. 형법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의 입장과 양성평등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상호 간의 동의하에서 그런 의견을 서로 냈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분 장관이 합의하면 기본계획이 마음대로 바뀔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전혀 그렇지 않고 기본계획 자체에도 문구가 ‘개정 검토’라고 돼 있고 개정 검토가 어느 정도 시한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지를 밝힌 것이지요,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다.

말씀드릴게요.

피해자 중심 제도적 기반 구축,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검토…… 그런데 이 정부가 장관 둘이서 합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도대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분석 그리고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11월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5월부터 7월까지 개최하였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6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 지자체 의견 수렴을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셨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했어요. 확정된 발표안을 두 부처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해서 무력화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를 운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철회가 아니고 있었던 ‘개정 검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는 게……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이미 정부는, 정부의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국무총리 주재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부위원장이 여성가족부장관이고 정부위원이 13명이고 민간위원이 10명인 회의를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면회의로 개최해서 최종 확정된 것이예요. 이것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장관님 마음대로 운영하시고 두 부처, 실세라는 한동훈 장관이 끼어들면, 이렇게 되어서면 각종 위원회는 뭐 하러 만듭니까? 정부의 시스템은 왜 필요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회의 최종 의결된 의견이 개정 검토이기 때문에 개정 검토의 의미를 법무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정부에서는 문자로 이렇게 기자들에게 보냈잖아요, ‘개정 검토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위성곤 위원 이 낱말의 뜻이 이해가 안 되세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위성곤 위원 장관님이 보낸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개정 검토와 관련해서 개정 계획이 없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개정 계획은 법무부나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통해서 개정을 5년 내에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국회에 이미 세 분의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위원장대리 유정주 보충질의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장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관련되어진 기본계획 변경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위원회에서 의결해 놓고 장관이 길길이 댕기고 그것을 문자를 보내고…… 도대체 이 정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동훈의 입만 보고 정치를 해야 돼요? 한동훈의 입만 보고 정책을 해야 됩니까? 한동훈의 입만 보고 국민들은 살아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개정 검토 의견의 이유를 보시면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충분한 입법례와 그다음에 국민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었고, 그것이 부처끼리의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양성평등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포함됩니다.

○위성곤 위원 포함이 되면 서면으로 아니 된다고…… 법무부에서는 16일부터 18일까지의 서면 개최에 어떤 입장을 냈지요?

○위원장대리 유정주 위성곤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개정 검토의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그 개정 검토 의견을 냈는데……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들었는데요.

저한테 개정 입장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유정주 위성곤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에서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무부에서 서면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법무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입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 생각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여가부가 C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평가의 항목이 5개가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정책 부분과 그다음에 규제혁신 부분에서 미흡을 받아서 전체 합쳐서 저희가 미흡을 받게 됐는데요. 주요 정책과제 추진 등에 저희는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사실은 부처 모두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여가부의 정부업무평가가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보통’을 받거나 예전에는 ‘우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여가부는 지난 1월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강간죄 검토 계획을 밝혔지만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반발이 있자 여가부는 만나질 만에 이를 번복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사실관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선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사안마다 100% 같은 의견을 낼 수는 없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하다가 보면 착오도 있을 것 같고 정책이 100% 딱 맞아떨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저는 정책이 한 60%만 성공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여가부가 우왕좌왕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킨 것은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개정 검토라는 부분의 표현이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언론이 이해하기에 따라서 이것을 빠르게 개정한다라고 이해를 할지, 아니면 사회적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는 것으로 이해할지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교 위원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가부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개편하고 21년 국가성평등지수부터 병행 발표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기존 지수대로만 발표해서 논란을 낳은 적도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도 저희가 2022년 12월에 확인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개편 지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 예를 든다면 측정 방법이 적절하나, 지역별 통계가 있느냐 없느냐 등의 통계 품질 문제가 좀 있어서요, 세부적인 지표 검증과 시범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추후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개편 지수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선교 위원 이 화면을 보시면 기존 지수 방식이면 소폭 상승하지만 개편 지표를 적용하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직 지수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바뀐 지수 부분 같은 것에서 육아휴직을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비 같은 것이 완전히 새로운 지표가 쓰이기 때문에 성평등지수에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사전적으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개편 지수는 언제쯤 발표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다 아시다시피 가뜰이나 지금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진 채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에서 통과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가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여전히 여가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나은 여성·가족·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불발되었고, 국회의 의견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시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생각이고 더욱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강화해 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주 간사, 권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교 위원 국민들은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만으로 피로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가부가 부처 현안마다 논란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여가부로 촉발되는 논란을 최소화해서 양성평등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앞에 있었던 비동의 간음죄나 국가성평등지수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다.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가보다는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가부가 지금 존속하고 있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성평등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통신매체 성폭력 근절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자가 16만 5000명,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지난해에 1만 594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7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것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경찰청 통계는 숫자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2022년에 1만 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대책은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우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징역 3년, 3000만 원 벌금으로 2020년 5월에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나 위장수사 규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성 착취물에 대해서 선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가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면서 동시에 법무부나 방통위나 교육부와 협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별로 교육이 차별화돼서 내용이 심도 있게 구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 부분이 엄청난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다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장관님, 여가부가 존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가부가 중앙부처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제대로 잘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방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양성평등 기본계획 관련해서 그 기본계획이 내부 보고자료, 내부 회의자료 또는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이런 다짐을 적은 일기장 같은 게 아니잖아요. 1월 26일 날 법률에 따라서 발표된 정부의 공식 계획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기본계획은 절차에 따라서 의결돼서 발표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 것이지요. 모든 국민들한테

대외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부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계획의, ‘앞으로 무엇 무엇을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논의하겠다’ 그 한마디에 코스피 주가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요, 이해 당사자들이 들썩거리기도 하고요, 언론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검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소영 위원 검토를 뭘 어떻게 해석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뭘 검토하겠다는 것을 기본계획에 다 적을 것 같으면 나중에 검토하고 나서 발표하면 되지 왜 이것을 5년에 한 번씩 장관들, 국무총리까지 다 모아 놓고 심의를 하고 왜 이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칩니까? 그 수립 절차 과정에서 모든 관계 부처의 의견들을 일단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정제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발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검토’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확정되지 않은,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것을 그냥 반영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가 의견 제출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팩트는 이런 거예요. 여가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견을 냈지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해외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을 그대로 논의하고 반영해서 기본계획안이 수립됐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이게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법무부장관도 그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는 ‘의견 없음’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팩트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고 한다면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은 했지만, 그 의견 수렴의 내용을 반영해서 안이 나왔고 그 안에는 이 강간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견을 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는 공식 계획으로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래서 개정 검토가 최종적으로 나간 겁니다.

○이소영 위원 개정 검토가 나갔는데…… 이게 전혀 가능성도 없고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문구를 그러면 왜 넣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제1차 기본계획 때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1차 기본계획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2차에서는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에서 다시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넣은 것이고, 그 검토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검토와 연구와 입법례와 판례들에 대해서 분석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김선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질의도 똑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그런 내용은 이런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부처 의견 수렴도 제대로 되기 전인데 그것을 왜 여기에 못을 박습니까, 이런 단어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팩트는 나름대로 여가부에서는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게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바로 한동훈 장관이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또 법무부 공지 후에 3시간 만에 ‘이런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없음을 알려 드린다’ 이게 논의하겠다는 말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한동훈 장관님……

○이소영 위원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그냥 이 정도 사실관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차 지적했듯이 이런 것 아니에요? 여가부가 정부 중앙부처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유능한 공무원분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버터나이프 크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업 계약까지 다 체결한 것을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한마디에 뒤집어서 취소하고 그다음에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알린 거기 보조금,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마디 쓰니까 ‘뺨를 짚는 자세로 보조금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가부가 중앙부처인데 업무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저는 거기 중심에 장관님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가부가 언제 폐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앙부처로서의, 독립한 부처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줄곧 여가부가 폐지되고 어디 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반복해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같은 국무위원이고 중앙부처인데도 이 정도로 독립성과 주체 없이 국회의원 한마디에, 타 부처 장관 한마디에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변명하시기 바쁘는데 여가부가 국으로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지 볼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다들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신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우선 사실관계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의 중단은 권성동 의원님의 폐북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적인 판단이었고,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했던 빠띠와 합의하에 사업은 순조롭게 종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촛불, 청소년 동아리 보조금 부분은 서울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조사를 했는데 보조금을 잘못 쓴 게 있어서 보조금을 회수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밝혀져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저희도 자체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가부의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을……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필요성 검토라는 말도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는 필요성 검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비동의 간음죄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한 게 있고, 사실은 이번에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개정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인 것은 맞지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의냐, 비동의냐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그다음에 입증 책임에 대한 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세 분이 지금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개정 검토로 표현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김이나 법무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의 위치가 서로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장관님, 지금 일관성에 의구심이 있어서 지적을 다들 하는 건데요. 여가부에서 법무부 입장 발표 이후 3시간 만에 나온 표현이 이렇게,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이게 문구거든요. 문자로 나온 문구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검토하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이 있으셨으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가 아니라 ‘정부는 앞으로 이 부분의 개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발표가 되는 게 일관적인 것이지요.

지금 장관님 설명 그 와중에 완전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요. 개정 계획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정부가……

○이소영 위원 검토할 의사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정부의 공식 계획 문서대로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험레벌떡, 마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논의한 적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일관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지적인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 권인숙 예, 정리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 말씀……

○위원장 권인숙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개정 검토의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큰데 언론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것을 즉각적으로 개정을 할 거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구로 저희 설명자료가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입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을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최연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자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후 1년 반 동안 483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여가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사람은 14명입니다. 즉 2.9%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저희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재 조치의 대상자 중에서 양육비 이행을 이행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연숙 위원 그래서 명단 공개자 중에서도 채무액 상위 5명을 한번 봤습니다. 5명을 보면 최고액이 1억 4000만 원이고요, 5명 모두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불이행 기간을 보시면 대부분 10년 이내입니다. 길게는요 12년 2개월까지 불이행하는 분도 계십니다, 명단 공개자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이렇게 12년 동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아이들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당연히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확고하게 변함이 없고요.

사실은 제재 조치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저희는 일부 효과는 있었는데 이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에도 명단 공개, 의견진술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현재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과연 소득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생각,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없고 우리나라의 제재가 좀 미약한 부분들이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생계로 하지 않는 분은 운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도 무용지물입니다.

정보 공개 또한 몇 년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3년.

○최연숙 위원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정보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독일은 최대 3년, 프랑스는 최대 2년 징역형을 선고해서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금 더 저희가 많은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일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득, 재산 심사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은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최연숙 위원** 저는 금융 거래나 카드 정지라든지 이런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서요 양육을 맡은 부모 쪽에서 양육비 걱정 없이 아기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되는 경우, 지금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양육비를 지급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습니까. 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받고 그때부터 기다려서, 불이행 기간이 9년, 10년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홍보를 같이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여성가족부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을 하시라고 판결을 내릴 때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한가원에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이 업무를 거의 다 도맡다시피 했었는데,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서 같이 위임도 해서 소송도 해 주지만, 저희가 올해부터 면접 교섭이라든가 아니면 양육비 이행 상담 안내를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다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가족센터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면접 교섭과 그다음에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국민들이 이와 같은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한부모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장관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주무 부처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현재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서 만 10~14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고요, 만 15~19세까지는 보호처분이나 죄질에 따라서 형법에 따른 형벌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2017년 대비 21년 청소년의 수는 12.9% 감소했습니다. 청소년 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촉법소년은 44.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촉법소년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범죄나 이런 것에 소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이 부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주무 부처인데 17년부터 21년까지 촉법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 44.9%는 굉장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 질의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양의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원영 위원**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의원영입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장관이 되신 분은 여가부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여가부 폐지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물 건너간 것 같아서 질문이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현숙 여가부장관께서는 여가부 폐지의 임무를 받고 장관이 되셨는데 여가부 폐지의 임무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업무평가에서 현 윤석열 정부가 찍어 내려고 하는 방통위나 권익위와 똑같이 C등급을 받으셨어요. 이 얘기는 노골적으로 장관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여가부 폐지하라고 보내 왔더니 맨날 저희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퀘변만 하고 말장난만 하는 장관 필요 없다, 그래서 답변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취급 받는 장관으로서 업무도 제대로 못 한다…… 이 정도로 평가를 받았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요?

게다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양의원영 위원** 제가 답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니다.

게다가 앞서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법적인 계획을 결정한 것을 단 8시간 만에, 아무리 이 정부의 황태자라고 해도 같은 지위에 있는 장관의 전화 한

통화를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그런 정도의 일밖에 못 하는 장관이, 그리고 나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하는 이런 궤변을, 이런 말장난을 누리는 그것이 정말 글로벌 10위 국가의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지만큼 가볍게 휘날리는 그 발언과 궤변으로 인해서 ‘먼지 김현숙이다’, ‘궤변 김현숙이다’, ‘허수아비 김현숙이다’……

○정경희 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정치공세 그만하시고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양의원영 위원 이런 식의 비아냥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나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인신 모독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여성의 지위 문제와 성차별 문제, 폭력 문제, 청소년 문제, 가족 문제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장관 한 명이 잘못 온 것 때문에 여가부 전체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권성동 의원 한마디에, 페이스북 하나에 정책이 뒤집히지를 않나, 한동훈 장관 전화 한 통화에 국무총리까지 위원장으로 참여한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가지고 문자 하나로 날리지 않나……

안 부끄럽습니까?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정말 한심함을 넘어서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낮 뜨겁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로, 앞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것을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를 못 하니까 여가부에서 여성 지우기를 본격적으로 나서고 계세요. 예를 들면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자고 1차, 2차에는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기본계획 내용으로. 그런데 이것을 성별 대표성으로 갑자기 여성을 지워 버렸어요.

공공부문, 특히나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지방공기업, 교원, 군인, 경찰, 정부 위원회 각각에서 여성 관리자급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것은……

○양의원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서의 임원급 여성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는 익히 알고 있고 OECD 국가 내에서 유리천장지수가 29개 국가 중에서 29위로 꼴찌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부문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런데 그것을 삭제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별 대표성으로 해서 여성을 지워 버렸어요. 이 건도 그렇고요.

또 보면 여성정책 담당 부서도 축소를 했어요. 1명 더 확보하느라고 부처 내 과별로 열심히 경쟁을 하실 텐데 여성 쪽 담당 부서의 현원을 지난 8월 달에 한 40명 되는 사람을 33명으로 줄였고 대신에 가족 부서를 42명에서 44명으로 늘렸는데…… 40명이군요. 40.5명에서 44명으로 3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렸으면 여가부가 2021년 4월 달에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의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행할 만도 한데 그 건을 또 대폭 축소를 시켰어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만 건강하다는 인식을 주는 형태로. 여가부의 기본 내용도 바뀌었어요, 가족 부서의 사람은 늘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가족 부서에서 사람을 늘린 것은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평등지수에 대해서 2021년 12월에 개편안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평등지수를 발표하셔야 되는데 개편된 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표로 발표하셨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기존 지표로 산출한 지수는 75.4점이고 개편된 지표로 성평등지수를 측정해보면 이것보다 15점 낮은 60.4점으로 나오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대답을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질의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양의원영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양의원영 위원 15점 낮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15점이 낮은지 14점이 낮은지 얼마나 낮은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발표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발표한 적 없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러면 그 결과만 나온 거군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안에서 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본의 문제 때문에.

○양의원영 위원 왜 기존 지표로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새로운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좀 많아서 기존 지표와 원래 새 지표를 병기하려고 했다가 새 지표에 통계적인 문제를……

○양의원영 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시기 바라구요.

지금 기존 지표를 가지고 지방정부는 다 그것을 반영해서 점수를 내고 있는데 중앙정부인 여가부가 스스로 수천만……

이것 개발하는 데 돈 얼마 들었지요? 500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아까 양성평등 계획 이것도 한 7000만 원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역 해 가지고 결과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은 국민 세금을 들여 가지고 용역해서 결과 내고 새로운 지표 개발하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가지고 있던 일로 하고.

제가 질문한 건은 두 건인데요. 하나는 여성부서 사람을 줄여서 가족 부서로 늘렸으면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더 늘었는지를 여쭙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개편된 지표보다, 그러니까 개편된 지표로 하면 15점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것으로 바꾼 게 아닌지 그 건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인숙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첫 번째는 인원을 2022년 9월 기준으로 양의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월 31일 날 또 직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성은 3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2.9명에서 36명으로 증가해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2명 부족한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데 청소년국은 4명이 부족하

고 기획조정실은 4.4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다른 국에 비해서 여성국의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 물론 부족해서 계속 충원할 예정이지만 다른 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고 상당히 바뀐다는 말씀 드리고요.

○양의원영 위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가족 부서에 대해서 늘어난 것에 대한 업무 증가가 뭐가 있냐고 여쭙봤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가족국의 업무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개편 TF를 만들어서 팀장 1명과 팀원 3명의 일로 이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가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이고, 현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산하기관 업무에서 사실혼에 대해서 차별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두 번째 질문……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하시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셔서 첫 번째 질문이……

○양의원영 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니, 듣는 것도 잘 못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두 번째 개편된 지표를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점이 낮아졌는지 얼마가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개편된 지표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면 발표할 것이고, 양평위를 통해서 의결해서 발표할 것이고 위원님께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씀이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요. 아직 지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15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그 얘기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모르고 있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예측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권인숙** 여기서 정리하시지요.

○**양의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애기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너무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셔서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인숙** 일단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필요하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지금 주셔야지요.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용혜인 위원님……

○**정경희 위원** 위원장님,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용혜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지금 이렇게 심하게 정치공세, 신상 모독을 했는데 왜 장관한테 해명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해명할 기회를 당연히 주셔야지요.

○**위원장 권인숙** 용혜인 위원님 하시지요.

○**용혜인 위원** 정경희 간사님, 제 질의 시간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따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장관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여가부 폐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사퇴하실 거냐라고 여쭙봤던 것 기억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용혜인 위원**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여가부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더 큰 부처로 가서 더 큰 영역에서 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혜인 위원** 여가부 폐지 여전히 소신으로 갖고 계시고요.

장관님 임명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여가부에서 일을 하면서 폐지 말고 크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지밖에 모르는 장관님이 수장으로 있는 여가부가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소수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본연의 업무 대신에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장관급 부처 중에는 C등급을 받았잖아요. 159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고 국정조사까지 받고 국회로부터 탄핵까지 받은 행정안전부도 B등급을 받았는데 여성가족부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발굴, 예산 확충 같은 여가부 본연의 업무에는 관심이 없고 폐지에만 몰두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도가 담긴 결과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앞 질문도, 저희가 다른 일을 한 게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용혜인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지 않았고요.

C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규제개혁에서 미흡해서 C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과연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의 눈치 보기도 못 봐줄 지경입니다. 오늘 비동의 간음죄 많이 얘기 나왔는데요 그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부가 여성의 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권 실세 눈치 보거나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총장인 시절에도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가부가 법무부장관의 부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가부는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바로 꼬리 내리고 눈치 보고. 저는 여가부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반대 논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입법 독주라고 맨날 윤석열 정부는 비난하면서 또 이런 것은 비겁하게 뒤로 발 빼고 국회에서 논의해 주면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합니까.

여가부는 최소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성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이런 이슈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개월 내내 여가부 폐지만 내세웠던 그 결과로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여성인권의 후퇴에 대한 우려만 남기고 행안부도 받는 B등급도 못 받는 유일한 부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가부 폐지안 통과 안 되면 사퇴하실 거냐라고 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지막 여가부장관으로 남겠다는 그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여성과 청소년, 소수자들의 권익 증진이라는 여가부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C등급을 받을 정도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성·가족·청소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도대체 뭘 강화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C등급을 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지도 못 하고 업무평가에서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했으면 최소한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말씀을 드려도……

○옹혜인 위원 장관님, 이틀 전에 아주 중요한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뭘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옹혜인 위원 예, 맞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 해당 판결의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를 시정해라 그다음에 사회보장 차원의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옹혜인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같이 함께 중요한 것은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는 판결을 법원이 한 건데요. 이 판결의 취지에 장관님 공

감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권의 문제, 차별 대우를 시정해야 되는 부분, 보호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판결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동성혼의 인정 여부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옹혜인 위원 법원의 판결조차도 ‘동성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존중하지 못하는 정부 부처 장관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이미 정부에서도 사실혼 관계의 범위를 혼인 관계와 똑같이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동성 간 결합도 사실혼 관계와 다르지 않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재작년에 발표했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첫 번째 정책과제가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 제도의 마련입니다. 법원에서의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가 이미 국가계획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이 올해로 3년 차예요. 가족 다양성 법률 개정 제대로 여가부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준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정할 것 하나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혼인을 현행 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이 내용들 좁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들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부처 이관이다, 장관님이 큰 부처로 가서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기 때문에 우스운 겁니다.

제대로 해야 될 것들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면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철회할 건지 무시하고 이행 안 할 건지 이런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으면서 무조건 여가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가면 권한이 더 커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데요. 윤석열 정부가 가족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라라고 인식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분명히 다양성이 존중되고 가족 유형의 다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라든가 조손가구라든가 그다음에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

○옹혜인 위원 그런데 동성애 커플에 대해서만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은 상당히 상위법인 민법에서도 얘기가 돼야 되고 엄청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옹혜인 위원 법원에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루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각 사안을 결정하지만 이 판결의 내용들을 확장하고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만드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만든 이 국가계획,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까지 확실하게 답아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최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족 다양성 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생활동반자법 관련된 토론회도 열고 법안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여가부의 입장대로라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아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분명히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동성혼을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옹혜인 위원 이 판결 자체가 동성애 커플에 대한 판결인데 어떻게 그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다릅니다, 위원님. 판례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법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니까 이 판례를 존중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 판례는 마지막 대법원의 판례도 아니고 2심의 판례입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 판결은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옹혜인 위원 왜냐하면 동성애 커플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 판결 자체가 동성애 커플에 대한 판결인데 어떻게 동성애를 빼놓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옹혜인 위원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도 역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연이어서 계속 저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가부 폐지나 아니면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질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기회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 잘하셔서 한 시간 드려도 충분히 질의하실 역량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가부 폐지 아직도 주장하시잖아요, 마음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마 정부조직법 협상안, 폐지론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막을 것이기 때문에 떠 있는 마음 정리하고 여가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혜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서 대법 판결이 아니어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물론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되겠지만 부처의 의견도 건강보다는 좀 더 일반화된 용어를 쓰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고 저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약간 제한되게 두고 법적인 부분을 바꾸는 논쟁보다, 어차피 이 부분은 가장 상위법인 민법이 개정되면 연이어서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가부가 그 부분보다는 정말로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위원** 요즘에 정부조직법이 워낙 이슈니까 국가보훈처도 국가보훈부로 올려 달라고 하고 재외동포청도 신설하는 안들이 지금 일정하게 합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부처를 더 격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각 당, 여야 교섭단체를 쫓아다니면서 하고 계신데 여가부만 유독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차관급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차관과 장관……

○**장경태 위원** 국무위원도 아니고.

물론 장관과 차관 사이라고 하지만 국무위원은 확실히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

으로 생각했을 때 국무위원, 장관급보다 장관이 더 제대로 된 역할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위상으로는 위원님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권한이나 예산이나 인력 부분……

○**장경태 위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통화 때문에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양성평등위원회 이것부터 먼저 지적하면, 이 회의에서 일단 결정은 한 것이지요? 소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양성평등위원회에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잖아요. 부위원장이고.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최종 의결하십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장경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두 장관이 협의할 권한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둘이 그 내용에, 원래 있었던 내용을 법무부장관하고 여가부장관이 합의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최종 양성평등위원회 속기록이나…… 당연히 회의록 있겠지요, 정부 위원회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회의록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시다라는 서면 결의를 해서 서면 의결을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법무부는 ‘의견 없음’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는 아까처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개정 검토 의견을 내고……

○**장경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의의 의견을 서면으로 ‘의견 없음’을 받고 그것을…… 위원회 종료 시점이 있는 건가요, 서면으로 받으면? 서면으로 받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서면을 받아서……

○**장경태 위원** 추가로 구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검토의견을 냈고……

○**장경태 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수정 서면이

왔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수정 서면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현재 서면으로는 ‘의견 없음’이 최종 의견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데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논의하던 과정에서 개정을 검토한다고 낸 의견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론 다 논쟁,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여가부장관님이시고 각 정부위원들로 장관님들 다 들어오셔서 서면 의결을 했는데 위원회의 의결이 된 이 기본계획을 혹은 수립이 된 것을 서면으로, 문서로 공문서 남겼을 텐데 그것이 갑자기 입장이 바뀌거나…… 그리고 이게 도입도 아니고 그냥 검토 정도의 워딩이 수정될 정도로 이게 그만큼 심각한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 논의 과정에서 버터나이프 크루 문제도 그렇고 전화 한 통화로 사업이 뒤집어지냐, 여가부 정책이 전화 한 통화로 되는 거냐 이런 문제 지적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 논의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저도 좀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얘기 때문에 버터나이프 크루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의 이 논의도 개정 검토를 언론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의견을 낸 것이지 개정 검토는 지금부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본인이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구도 진행하고 다양한 판례에 대해서 수집도 할 것이고 여성가족부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양성평등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장이 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부위원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이면?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복지부장관이 하시는 것이지요.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부장은 직접 의견 개진권도 없고 복지부장관 통해서, 지금은 여가부장관께서 부위원장이신 위원회인데 그 본부장이 위원으로도 못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그게 권한과 지위가 격상된다고 할 수 있나요? 격하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복지부장관의 업무 범위가 지금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는 부분의 대부분을 포괄하기 때문에 저는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도 그냥 그대로 장관급 안 하고 차관급, 지금은 장관급 대우받지만 차관으로 남으셔야지요. 왜 굳이 이런 부처들은 올립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국가보훈처는 이미 보훈지청들이 있어서 하부구조나 전달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부처로 격상했을 때 업무를 하는 것에 되게 도움이 되지만 여성가족부는 전달체계가 너무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임금의날 아시지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목요일이 임금의날인데, 임금격차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이 통계 공표 안 하셨지요? 원래 임금격차를, 매년 성별 임금 통계 발표해 오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요? 저희는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작년에도 DART에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ALIO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부가 냈던 보도자료도 확인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 보내 주시지요.

어찌 되었건 올해도 종전대로 성별 임금 차이 공표하실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고용부가 하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고용의 300인 이상 임금격차 부분도, 고용부가 자료를 가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낼 생각입니다.

○**장경태 위원** 여가부, 끝까지 하셔야 되니까

열심히 이번에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신·변종 룸카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저도 자식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기순 차관께서 직접 서울시 현장 점검·단속에 동행했다고 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기순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시에서 진행한 룸카페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르면 48곳의 룸카페 중 26곳이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위반 사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현재 룸카페는 일반음식점 또는 자유업으로 신고 후 영업하고 있어서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렇게 다들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또 단속 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미비해서 현장점검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청소년유해업소 여부 판단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현장에서 실제로 단속하시는 지자체나 경찰분들의 말씀은 단속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면 좋겠다, 어떤 것이 이에 해당되는지 어떤 법적 기준을 미달해서 제재가 돼야 되는지 하는 단속 기준에 대해서 단속 기관들이나 업주들의 현장 문의가 굉장히 많다는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보려고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점검·단속의 어려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파악된 애로 사항과 거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현재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는 그 부분, 시설 형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몇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문과 통로 쪽 벽면은 바닥

1.3m 부분부터 천장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냈고, ‘잠금장치가 없어야 한다’ 그다음에 ‘커튼이나 시트지 등 어떤 가림막도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장점검·단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PPT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룸카페에서는 밖에서 안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창이 있더라도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 놓은 곳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장관님 말씀대로 우선은 완전한 밀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 시급성을 어떻게 지금 행정으로 하고 계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3월 24일까지 단속 기간이거든요. 서울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고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단속 중인데 단속하고 있는 단속 점검반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이미 가이드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조은희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성인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온라인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은희 위원 예.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방통위나 그다음에 교육부나 이런 데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은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고 저희가 고시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속도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내용에…… 지금 온라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부분……

○조은희 위원 앞부분의 청소년 카페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룸카페는 저희가 고시

내용에 룸카페를 예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시 내용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음식업이라든가 자유업으로 많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빠른 시일 내의 점검이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이드라인 문제보다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법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풍선효과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막으면 또 다른 쪽에서 변종의 어떤 업종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 고시 내용도 조금…… 단속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의 단속의 수월성 때문에 명확한 단속 기준을 얘기하시고, 그런데 동시에 또 포괄적이지 않으면 변종으로,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시 내용에 대해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앤드(and)로 연결됐을 때 다른 법에 다 돼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시의 개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다음에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조은희 위원 과태료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과태료 맞고 치우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희 위원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풍선효과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그냥 과태료면 과태료 얼마 맞고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가부 차원의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금 더 심도 있게 검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검토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 최승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여전히 할 일이 많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작년에도 저희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올해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일들이 사실 혁신적인 것보다는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쳐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고군분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 분야는 여가부 주관으로 매년 4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매년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는 주요한 수단인데, 여가부 존재 이유 중에, 이런 교육에서 소외된 분들이 실제로 너무 많고요. 교육에서 소외됐다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한 극단에서 미투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던 성폭력 사건도 있고.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라 하고 있는 공연계·예술계는 이 관련된 내용들이 그냥 관행처럼 이어진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끊이지를 않지요. 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골프장 캐디 그다음에 특고 보험설계사 이런 부분들, 특고 층에서도 아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교육을 통한 보호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특고분들은 폭력예방교육 기회나 접근성이,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기회가 좀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부가 예방교육을 맡은 주무 부처인데 그에 대한 기회와 접근성이 취약한 특고나 그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스검침원,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승재 위원 문제는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조직이나 정규직 같은 분들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성폭력을 당했을 때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겪을 고통,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사실 그 안에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항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일용직이거나 아니면, 특히 공연계 같은 경우는 단발성일 수도 있고 사실 장기적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입증에 관련된 부분도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피해들이 많고 수면 밑으로 부작용들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희롱예방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만 받고 있고, 물론 찾아가는 교육도 하신다고 그러지만 교육 이수 실적도 따로 공유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노동부에서 일부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소외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와도 실적 공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이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민간 기업의 사업장들은 고용부의 소관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계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고용부는 사실 특사경 제도가 있고 근로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여가부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이렇게 기간제든지 단시간 근로

로자든지 특고든지 더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 실적을 여가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고려해서……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연극계 얘기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비동의 간음죄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보니까 법무부장관도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법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그렇게 법률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지금 성범죄·성폭력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입증책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벌을 시킬 수 있느냐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피해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위증에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피해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에 정말 심각한 피해가 양산되고 계속 만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을 법무부하고 조율하겠지만 비동의 간음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그다음에 당연히 겪어야 될 오랫동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강조된다는 의미는 도리어 지금까지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게 가족인데 가족에서 보면 양성에 관련된 평등 부분을 여가부는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개정 검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법무부와 협의할 말씀을 드린 것은 입증책임뿐만 아니라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물론 현재 강간죄 성립이 폭행과 협박으로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인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구요. 그리고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을 법률화했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과장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부는 이번에 법무부가 이 논의를 주무 부처로서 해 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도 저희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판례 동향도 좀 검토해서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장관님,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산율, 우리나라는 0.78명으로 여전히 OECD 최저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1명 미만인 나라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한규 위원** 우리 정부에서 출산정책은 보건복지부, 여가부는 가족정책 이렇게 나눠서 담당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만 저희의 가족정책은 저출산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여가부장관도 정부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참여하시는 또는 여가부장관이 참석하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언제 열렸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알기로는 3월에

회의가 열릴 것으로 들었고요. 얼마 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를 내방하셨는데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에서 저출산이 포함……

○**김한규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이제까지 언제 열렸느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까지는 대면으로 열린 적은 없고 다음 달에 대면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줌회의, 온라인 화상회의로는 열렸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김한규 위원** 그러면 대면회의로 열렸다고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렸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한규 위원** 차관님 참석하셨는데, 보도자료 제가 찾아보니까 참가 부처마다 주요 어젠다 발표하고 정책 발표 공유했는데 여가부는 여기서 어떤 내용 발표하셨습니까?

차관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정책의 한 축으로 여가부는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저희가 추진하려고……

○**김한규 위원** 아니요. 그 회의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과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올해 발표하는데 그 부분을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가족센터 서비스 기능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고 가족 변화에 따라서 서비스가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확충하고 국민들한테 잘 알려 드리는 내용이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지금 초등돌봄을 교육부가 하고 있지만 여가부가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확충하는 사업을 주요 골자로 보고드렸습니다.

○**김한규 위원** 물론 다 필요한 정책이고 꼭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저출산정책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라는 현상 자체는 전제를 하고

여가부에서 정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출산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직접적인 정책을 여가부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그렇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틈새보육 서비스로서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이돌봄 서비스 하나로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새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을 1년 반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서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너무나 큰 국가적인 난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총력을 다해서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 위원** 동의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고, 결혼을 해서 아이 낳아서 기르기가 편하다는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런 정책을 통해서 당연히 출산율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인 건수도 어제 발표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0.4% 줄었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는 10%, 19년에 비해서는 20% 줄어들었는데, 원래 정부가 방역조치 때문에 결혼이 적었고 코로나가 정리되면 결혼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틀리고 있고. 기존 통계청 예측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어제 통계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제이고, 어제 총리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 정책을 다 맞춰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정책을 여가부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진행 중인 정책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를 좀 여쭙볼게요.

건강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도 있고? 지금 동성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관님, 건강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은 지금 법에 아마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을 이상적인 모형으

로 생각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떠한 가족도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테피니션(definition)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일단 법에는 말씀하신 정의는 없고요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고 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남녀가 동거를 하다가 출산을 했고 그런 사실혼 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법상 건강가정에 해당하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그런 업무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한규 위원** 아니, 해당이 됩니까? 건강가정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김한규 위원** 아니, 건강가정법이 있고 지금 진흥원도 있고 여가부의 주요 정책인데…… 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혼하거나 동거 중 헤어져서 편부모가 되면 건강가정에 해당하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금 더 이상적인 목표로서, 아까 위원님이 테피니션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김한규 위원**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이 아닌 가정은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건강가정이 아닌 가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달리 생각하는데요……

취약가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법에 정의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가족이 취약가족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취약가족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 굉장히 낮아서 정부의 어떤 부조, 공공부조를 받는 그런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일반적인 가족보다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니즈가 있는……

○**김한규 위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한규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은 취약가족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물론 취약가족의 범주에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모든 한부모가족을 다 취약가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다문화가족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다문화가족도 일반적으로는 취약가족이라고 보지만 모든 다문화가족이 취약가족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법 34조의2 제7항 5호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법조인으로 해석을 해 보면 당연히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취약가족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취약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법이 불필요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결혼을 해야 건강한 가족이고 이혼을 하거나,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이런 선택을 오히려 하는 게 낫겠다…… 괜히 내가 건강가족이 아니거나 취약가족으로 분류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싫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저는 장관님하고 동일하게 초저출산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난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가부가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 되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 것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부분, 사회적 관념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불필요하게 이런 건강가족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가족정책 기본법 이런 법률로 대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 생각 없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취약가족에 한부모, 다문화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부모나 다문화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때, 특히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60%라든가 그런 기준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한부모가구도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취약가족이라고 하면 조금 더 텐

던시(tendency),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텐던시가 높은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고.

큰 의미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테피니션을 잘못 뒤서 낙인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펴는 데서 방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해 보는 게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정부의 필요한 지원을 사각지대 없이 받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동성혼의 얘기라든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프랙티컬(practical)한 면에서 지원을 확대해 가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좋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여기 있는 법 제가 다 봤는데 충분히 조정은 가능합니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논란을 마련하지 않고, 동성가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허용 여부 논의할 필요 없이, 그것하고 관련 없이도 충분히 개정할 여지가 있는데 최소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이 취약가족이라고 정의되어지는 이런 부분은 다음 법 개정할 때 충분히 우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같이 한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장관님, 내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일.

○**이원택 위원** 제가 볼 때 여가부 폐지안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여가부 폐지를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양성평등위원회의 결정사항, 한동훈 장관의 영향이 있다, 실세 권성동 의원의 영향이 있다 없다 또는 C등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내일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면,

이 자리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자리는 아니어도 좋지만 적절한 시기에, 저는 사퇴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또 사과는 아니더라도 유감 정도는 표명하고 다시 한번 여가부가 정말 여성가족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방식이나 시기나 이런 것은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10월 7일 날 이데일리하고의 인터뷰 기사에 ‘여가부가 폐지되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서 평가될 것이므로 아쉬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아픈 말입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말인데. 마지막 여가부장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가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장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매듭짓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위원님 얘기에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여성가족부의 개편안을 낸 것은 지금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스피릿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정부조직법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국회에서 결정해서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제가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을 평가할 때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이지요.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라든가 업무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 왔고 또 외풍에 휘둘린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정부조직법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권

익 신장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또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국민도 있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통합하고 함께 나아가서 양성평등정책을 잘 꾸려 가겠다는 그런 적절한 표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챔버리가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세계챔버리가 진척되고 있는데, 범부처 지원 대책 회의 같은 것을 총리 주관이나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정부지원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이원택 위원 아직까지는 안 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1차 한 번 했고요.

○이원택 위원 제가 1차 한 번 알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다음에 2차……

○이원택 위원 지금 공백 상태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수송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KTX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 이미 포함이 됐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다 포함되어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포함됐습니다.

○이원택 위원 국무조정실장 주관이든 국무총리 주관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가 협력해야 할 사안들을 정확하게 도출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미스가 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것을 주무 부처 장관이 좀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참가자 안전대책도, 사실 대집회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2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4만 5000명이 들어가려면,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임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3개 정도 더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장관님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4만 5000명이 10일간 있는 거니까 의료시설에 대한 인력 대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클리닉 5개소 중에 1개소만 안을 좀 잡은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원광대학교 5개량 지금 MOU를 맺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전북대병원하고도 같이 저희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그런 대책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시설 공정률이 사실 제가 보니까 기반시설이 62%, 상부시설 5%, 대집회장 75%, 글로벌 리더센터 40%, 직소천 과정활동장 30%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속도를 점검해서, 이 시설들을 사전 점검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 시설 운영도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이원택 위원 이것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 4만 5000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한 4만 3000명 정도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4만 3000명 정도가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의 행사 아닙니까? 국제적인 행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도 190개 프로그램 중에 80%만 개발이 완료됐고 20%는 지금도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테스트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현장에서 운영을 해 봐야 수정 보완해서 거기에 맞게 잘해 갈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6개국 언어를 쓰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중동, 아랍어, 러시아어 이렇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준비할 것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개폐영식 예산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화교류의 날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문화교류의 날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한번 지적하고요. 또 개폐영식 행사에 태권도 공연이든 K-pop이든 이런 예산이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예산을 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여가부가 주관 방송사를 선정해서 하겠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주관 방송사는 지금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이 저희 조직위원회에 공동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홍보는 여가부가 물론 전체적으로 주관하지만 문체부의 협조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예, 그게 5개월이기 때문에 좀 가시권에 두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직접 회의를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개폐영식에서의 어떤 행사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간 동안 다중 밀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 실에 필요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정리해서 보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사이에 여가부 폐지 이러한 굉장히 여가부가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여가부의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더욱더 기능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련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강사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반납 조치를 완료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찾고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전주혜 위원 그리고 또 이 단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중

회수를 완료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 단체 외에도 여가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 국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 보조금이 제대로 용도대로 쓰이는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인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워낙 양이 많아서 4월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 국감 때 김선교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6개 정도 큰 부정 사례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지금 진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4월이 지나면 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것은 이 단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또 시민의 혈세로 보조되는 돈을 용도 이외의,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끝나면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소속 동아리로만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 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절차를 바꿨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 제도 정비도 굉장히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한번 확인이 되는 대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747만 원 정도……

○전주혜 위원 747만 원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전주혜 위원 그러면 그게 강사료 등 증빙자료 제출이 안 된 돈이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러니까 증빙자료, 강사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전주혜 위원 얼마를 보조했는데 747만 원을 반환한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게 여러 해 동안이고……

한 2125만 원이라고 저희 청소년국장이 말씀하십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그중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불필요한 용도로 썼다는 거라 이런 면에서도 이러한 단체들의 도덕적인 해이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시스템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점검을 통해서…… 왜냐하면 점검을 안 하니까 그동안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그냥 방치돼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국가기관으로서 점검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여가부에서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권력형 성범죄 방지 대책 아니겠습니까. 오늘 통과한 법안에서, 제가 발의한 권력형 성범죄 방지 법안 중의 하나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한다 이런 법안이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지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사위원회,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조사하게 되는 이 법안이 아직 여가부에 있습니다만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가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부의 기능에…… 사실은 전 서울시장이랄지 아니면 전 부산시장이랄지 이런 분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오히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눈치를 보고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여가부가 신뢰를 잃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전주혜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발생할 경우에는 여가부가 단호하게 가해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피해자 중심주의,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어서 저희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여가부가 피해자로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공소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만 1700만 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1500만 원.

○**전주혜 위원** 1700만 원 정도 횡령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됐어요.

물론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시다만 여가부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지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서 회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긴 한데 아직 이게 1심이기 때문에……

○**전주혜 위원** 얼마 정도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6520만 원인데요.

○**전주혜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전 여가부장관께도 요청을 했던 게 여기에 대한, 회수 조치를 위한 재산 가압류랄지 이런 것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전주혜 위원** 조속하게, 오히려 빨리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외교부랑 같이 공동 대응을 한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만 있는 게 아니어서 재산보전조치를 외교부에 같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심의 결과가 나온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것도 조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 아니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국회가 결국은 국민의,

민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부분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작년 기준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되어 연간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이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어린 학생들의 조기 성애화를 유도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기 성애화 교육의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에 충북의 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정액 체험을 포함시켜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센터는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정액 체험의 대상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초·중학생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신규 실무자 워크숍에서 페미니즘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 교육하는가 하면 센터 출신 인사인 이유정이라는 사람이 출간한 ‘성교육은 다음을 가르칩니다’라는 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책을 갖고 나와 봤는데요 이 책은 성적 즐거움, 동성애, 성소수자,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협의회는 인터넷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금기 대신 성적 권리를, 두려움 대신 성적 즐거움을 말하는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뒷면 커버에도 ‘성적 권리와 즐거움을 키우는 성교육, 모두 준비되었나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관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고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런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성의 권리라는 측면만 강조하면서 성적 즐거움을 키우는 게 여가부의 성교육 방향에 부합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보여 주신 정액 체험은 센터 자체로 했던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 성문화센터에서 교육할 때는 학교 등 수요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2023년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작년 말에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단체를 넥스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이 단체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혼전 순결을 강조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선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관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게 성교육 위탁 운영 단체로 지정되는 데 결격 사유가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게 보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희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같은 입장을 보면 결국 지금까지 청소년 성교육을 동성애를 교육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혼전 순결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채운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 저는 장관님께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의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가부는 그동안 교육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021년 6월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단체로 하여금 성교육 내용과 결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학교에 보고토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성교육은 다음을 가르칩니다’라는 이 책은 현재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이 쓴 책입니다. 현직 사무국장이요. 성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표준안에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과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는 내용이 없다. 학교 당국은 유일한 기준이자 혹시 있을지 모를 보호자 민원을 막아 줄 울타리로 표준안을 이용하며 잘못된 성교육에 도리 없이 일조하고 있다. 표준안 폐기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모든 내용이 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최신 성교육 자료라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것이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현재 협의회 사무국장직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학부모의 민원을 적대시하는 데다가 성교육 표준안에 따르는 게 잘못된 성교육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이런데 장관님께서 성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현재로는 시스템상, 아까 정액 체험도 자체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과도한 페미니즘과 동성애 교육, 조기 성애화를 유도하는 성교육 등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에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가 발의한 법률안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실적 보고만 받는 현실을 개선해서 교육 매뉴얼을 준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면

서 전문 기관으로 선정된 타 단체의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각종 사업이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편향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단체 선정이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앞으로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은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중립적인,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지나친 페미니즘에 물들어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지칭되는 편향된 성교육을 추진하면서 소수 여성단체의 이권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만 여가부 폐지 논의와 별개로 여성가족부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정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전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문화센터협의회뿐만 아니라, 양평원하고도 논의를 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무엇보다 있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저희가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주 위원 장관님, 앞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한 답변에서 개편 지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 중이라고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제15차 양평위에 2021년도 국가성평등지수를 보고하실 때 그 지수가 개편 지표 지수가 아니라 기존 지표 지수라는 점을 명시하

고 보고했습니까? 안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날짜를?

○유정주 위원 그 지수가 개편 지수가 아니라……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저도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입니다. 2021년 12월 지수 개편을 확정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2022년 12월 말씀하시나요?

○유정주 위원 예.

개편 지표 지수를 은폐할 목적이 아니라면 왜 언론에서 지적이 나올 때까지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것을 좀 여쭙보고 싶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유정주 위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런데 제 질의가 뭔지 이해는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그러면 개편 지표로 측정한 지수, 다시 내신 것 몇 점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 아직 제가…… 지금 계속……

○유정주 위원 모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통계 품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정주 위원 이것 나왔는데요, 보도로.

개편 지표로 측정해 보니 기존 지표 측정 지수보다 15점 이상 하락하였다고 했어요. 그것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기사는 여러 가지 추측성이나 예측을 가지고 했을 텐데 저희는 아직……

○유정주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물어볼게요.

왜 지금의 지표가 아니라 기존, 이전 지표를 발표했습니까? 기존 지표 지수를 발표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말씀드렸듯이 2022년 11월 30일 이후에 개편 지수를 통계에 적용을 처음 해 본 거예요. 해 봤는데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 지표가 지역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유정주 위원 그러니까 통계 품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런데 통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개선점을 얘기하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가 먼저 될 일이지 최근 조사한 것을 발표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발표해 버리는 것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지요. 최근에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정주 위원 제가 계속 좀 여쭙보겠습니다.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양평위의 심의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그리고 지난해 제14차 양평위에서는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및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지요.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그 개편안에 보면 개편 지표 적용으로 인한 지수 하락이 예상되며 앞으로 개편 지표로 측정한 지수를 발표하되 기존 지수 체계도 환산하여 병기하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14차는 그랬고 15차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유정주 위원 이 내용을 양평위에서 의결을 했고요. 그런데 여가부가…… 제가 문제점을 짚는 것은 여가부는 개편 지표 지수를 왜 뽕뽕 감추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달 제15차 양평위에도 신규 지표로 측정한 지수는 보고하지 않았어요. 기존 지표로 측정한 지수만 발표할 거면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평위에서 심의 의결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15차 양평위에서는 뭘 보고해서 완료했냐면요 개편된 성평등지수로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발표할 것인데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15차에서.

○유정주 위원 그것을 뒤늦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14차 양평위 의결을 따르지 않았을뿐더러 양평위의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임의로 개편 지표 지수를 은폐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은폐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유정주 위원 지난달 양평위에 2021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보고할 때 이 지수가 개편 지수로 측정됐는지, 신규 지표로 측정됐는지 명시하지도 않았어요. 명백한 양성평등기본법 위반입니다.

저희 방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보면 의원실에서 국가성평등지수 개발을 위해 수행한 2022년 국가 성평등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기존 지표를 바탕으로 작성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셨고요. 개편한 지표로 성평등지수를 측정한 결과 기존 지표로 산출한 것보다 15점 이상 하락한 수치가 나오자 의도적으로 개편 지표로의 지수를 은폐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가부는 지난 1월에 개최한 제15차 양평위에 개편 지표의 산출 지수 그리고 기존 지표로 측정한 지수만 보고하는 이유 등은 은폐하고 기존 지표로 측정한 지수와 개편 성평등지수를 수정 보완하겠다 이 단 한 줄의 설명만 보고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이것은 절대, 오해이신 것 같은데 은폐를 할 의도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은폐할 생각이 아니라 통계를 그 지표를 쓰기로 했는데 그것을 어플라이(apply), 적용을 해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대로 된 지표를 내자 이게 다입니다.

○유정주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장관님, 여가부는 지난 3년 동안 지표를 개편하면서 지표 타당성 검증도 거치고 지수 검토위원회도 운영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요. 2019년부터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물론 실제 측정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제점이 나왔을 수도 있지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렇다면 지수의 한계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뭔지 설명하고 발표하면 됩니다. 설득이 필요하다면 아예 그 지수를 은폐하는 것…… 그러니까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 아예 그 지수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지수를 완전히……

○**유정주 위원** 15% 낮게 나왔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표의 어떤 인덱스가 바뀌어서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낮아졌다면 그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졌다고 지표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해서 교정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발표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유정주 위원** 여가부가 이 지수를 발표할 때 지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개편 지표가 가진 한계를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가부가 양평위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마치 신규 지표 지수는 없었던 것처럼 본 위원은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질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또 본 위원은 국가성평등지수 은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장관의 인식이 반영된 사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지수에서 15%가 낮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지 않고 지난번 것을 발표한 거예요. 장관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성차별을 수치화한 지수를 공개할 수 없으셨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지표 개편과 무관하게 하락한 수치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싫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나온 것을 ‘통계 자료를 믿을 수 없어서 우리는 발표를 늦추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장관의 입장에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들 국민이 알아야 하는 지표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장관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이게 가려집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은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난해 양평위에서 심의 의결한 개편된 지표로 측정한 2021년도 국가성평등지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하게 발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장님, 잠시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인구 숫자가 다른데 인구가 적은 제주도가 과대 표집이 된 거예요, 인구가 많은 데보다. 그러면 그 지표를 그대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정주 위원** 그러면 기존 지표 지수라는 점을 명시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발표한 거요?

○**유정주 위원** 예.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서 이게 이번 것이 아니라 기존 지표 지수라는 것을 명시하고 보고했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명시하고 보고했습니다.

○**유정주 위원** 제가 앞서 ‘안 하셨지요?’라고 물었을 때는 ‘예’라고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여성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명시하고 보고했습니다.

○**유정주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존 지표 지수라는 점을 명시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성국장님,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권인숙** 추가질의 속에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처리합시다. 말을 듣고 그냥 하시지요. 장관님이 답변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그게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으로 하고요.

○**유정주 위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명시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15%가 낮아진 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라는 의혹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왜 계속 명시했다고 주장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절대, 절대, 은폐할 의도가 하나도 없었고 곧 발표될 예정이고……

○**유정주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했을 때 기존 지표 지수, 즉 기존 것이었다라는 것을 명시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 여성국장 말씀에 따르면 명시했다고 합니다.

○유정주 위원 명시하지 않았습니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인숙 일단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 반에 속개하여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예.

○조은희 위원 장관님이 충분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 권인숙 그 답변은 이따가 질의 속에서 해결을 하시고요. 나중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안내드렸던 것처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장관께서 신상발언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권인숙 아까 제가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정경희 위원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권인숙 그리고 질의 과정 속에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반복되니까 정리된 다음에 하십시오.

먼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세 이하 자살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총 1931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특히 자살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어떠한

든 자살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립감 같은 게 있었던 부분도 같이 혼재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선교 위원 특히 자살 원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니까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소년의 정신치료에 국가가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다행히 지난해 11월 여가부는 고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선교 위원 그 골자를 보면 고위기청소년 특화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자살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치우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크게 한 두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가 있는데요—거기에다 운영을 하고 거점센터 17개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2명씩 임상심리사를 배치해서 신속한 전문 심리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디딤센터라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고, 앞으로 2개 더 건설할 것인데 거기에 지금 촉탁의가 가 계세요, 3명·2명 이렇게. 용인에 세 분 그다음에 대구에 두 분인데 그분들을, 정신건강 전문의가 거기에 아예 상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김선교 위원 청소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들이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이겨 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을 잘 활용하고 또 교육지원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에 최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해 가지고…… 이게 현장에서 실질

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피해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저희가 청정동행이라고 해서 교육청 10곳과 MOU를 맺었고 지자체 5곳과 MOU를 맺어서 청소년정책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김선교 위원 한번 전국적으로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자체를 활용한다든가, 이게 바람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올해 3월에도 찾아가는 상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로.

○김선교 위원 그리고 장관님, 본 위원이 오늘 상정된 신규 법안을 훑어보니까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김선교 위원 이용선 의원, 안민석 의원, 홍석준 의원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 예.

○김선교 위원 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있는 기관을 보강하거나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라고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만 양육비 이행 관련 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센터 244개가 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에 대한 상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결을 하고, 청소년부모지원센터도 가족센터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청소년부모한테 지원해서…… 전달체계를 저희가 허브 기능도 조금 더 강화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선교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 분원이라든가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지역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다녀 보고, 정부가 안아 줘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이미 유사 기관이 있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과연 지금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님, 앞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정액 체험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은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성문화에 대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 과정에 관련 기관에, 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에게 확인을 좀 했습니다. 정액 체험이 뭐냐 물어봤더니 취지는, 초등학교 사춘기 학생들의 신체·정서적 변화가 많잖아요. 그 사춘기 교육에서 몽정이나 사정, 내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면, 인공 정액이라고 판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인공 정액이 팔리고 있는데, 그것을 만져 보고 그리고 냄새를 맡아 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끔 하고.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 사업도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는 애들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상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정이나 몽정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부모들이 요청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상상이, 생각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성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 사회도 제대로 알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청소년 일탈 문제로 되어지는 룸카페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일탈되어지는 곳으로 지목받고 있는 룸카페가 어떤 곳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일단 신고는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으로 돼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 침대나 침구류가 비치되어 있어서 단시간 청소년들이 머무르고 TV나 아니면 비디오물이나 이런 것도 시청할 수 있는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과거에 2010년대에는 멀티방이라고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유의 하나의 아류 형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여가부에서 관련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금 전에 말씀 올렸 다시피 사실은 이게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지난 2월 9일 날 지자체를 통한 룸카페 운영 현황 파악을 차관님 주재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아까 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168개소를 점검해서 37건의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동안 여가부가 이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관련 고시를 만들었어요. 고시의 내용을 보면 ‘시설형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비유형.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 비치. 컴퓨터·TV·비디오물’…… 이런 고시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되고 있는데 이제야 நட장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련 고시를 관리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지요.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여가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내용 중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고시는 만화방 그리고 보드게임장 등에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또한 고시 내용 중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라고 하는 주관적 기준이 지표로 돼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이런 공간에 가는가 생각을 해 보면 청소년들이 가서 마음껏 지낼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두 가지 다, 앞에 고시 개정 부분 말씀하신 것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신 말씀도 드리면 사실은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이 지속적으로 해 왔고 2021년에도 145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처럼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룸카페라든가 만화방이라든가 보드게임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단속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해서 저희가 좀 검히히 위원님 의견은 수용하고, 고시 내용도 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많이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3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수련관이 동네에 좀 있습니다. 한 800개 정도의 수련시설을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지금 저희가 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더 넓힐 수 있는 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내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하는 학교가 지금 5개 있고 올해도 저희가 하나를 더 운영하게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들었고요.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개소당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개소당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400만 원을 지원하다 200만 원으로 깎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성곤 위원 왜 여가부에 드리냐면 여가부가 종합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서 얘기한 단속의 문제도 경찰이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컨트롤타워로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 안에서 늘릴 수 있게끔 지도를 한다든가 연구 용역을 해서 지원을 하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여가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청소년들을, 지자체와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같이 내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활동 공간을 넓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 장관님, 1차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청소년 수 및 촉법소년 현황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청소년 수는, 17년에 비해서 21년의 청소년 수가 12.9%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은 7533명에서 1만 915명으로 44.9%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4.9%가 아니라 청소년 인구 감소에 비하면 50%가 훌쩍 넘어가는 이런 증가인데요.

강도나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최연숙 위원 소년범의 재범률이 30%가 넘고 있고요, 재범에 걸리는 기간도 소년원에서 나온 뒤 6개월 이내가 45%가 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원에서 최대 2년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교정 성적이 좋으면 성인의 가석방처럼 임시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년 보호처분을 받아도 평균 1년 3개월, 즉 15개월 정도가 지나면 소년원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런 임시퇴원자가 전체의 66.4%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보시면 2020년이나 21년에는 임시퇴원율이 높은 것이, 그리고 수용 인원도 적은 이유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가능한 한 여기에 수용하지 않고 빨리 내보내는 것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소년원에서 15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면 기록에도 또 남지를 않아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애들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처분에 대한 논쟁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 마련과 함께 소년법 개정안을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소년보호처분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교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요,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주무 부처인 여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사실은 두 가지 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구조사를 보니까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할 거냐, 만 13세로 할 거냐 좀 논쟁이 있었는데 만 13세가 된 이유는 그때의 범행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거여서 촉법소년을 연령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청소년 주무 부처로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화라든가

청소년 전문상담 그다음에 청소년 윤리의식 제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축으로서.

그래서 두 대안 모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지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의견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지금 재범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5%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원칙적으로는 만 13세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이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교화와 윤리의식 제고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똑같이 필요하다, 그것이 여가부의 입장입니다.

○최연숙 위원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최연숙 위원 그리고 장관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라고 그러지요? 직업교육훈련을 여가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서 직업교육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취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남아 있지를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상당히 단순한 지표만 지금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새일센터는 그나마 취업 현황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직업교육훈련원에서는 지금 아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할 때 이런 근거자료가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지적 맞으시지요. 현재 경단여성의 직업교육훈련에서는 수료율하고 취업률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e새일시스템을 개선을 좀 하고 관리를 강화해서요 고용유지율 같은 것도 좀 넣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종의 문제라든가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살펴보고 고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을 갖고 저희가 정책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최연숙 위원 장관님, 두 사업 간의 연계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창출할 수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새일센터 쪽 것은 자료가 있는데 직업훈련 쪽이 없어서 그것을 e새일센터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함께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최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장관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가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노인 자살 1위이고 청소년 자살은 4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26명 정도가 자살했고요, OECD 평균은 11명 정도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날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27년까지 자살률을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자살위해물건 관리 강화를 위해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대체 보급하겠다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님, 들어서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은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면 자살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아주 주요한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대책이 될 수도 없고 정부 대책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요. 만약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유해성 농약도 생산 금지해야 되고 인체에 무해한 농약만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겠지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번개탄 생산 금지, 날카로운 물건들 생산 금지, 노끈처럼 위험한 물건 생산 금지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니까 부탄가스, 부루스타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사실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인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을 짤 때 아마 관계 부처 회람도 하고 의견도 받았을 것 같은데, 여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왔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요청이 왔습니다.

○이원택 위원 여가부는 혹시 번개탄 생산 금지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자세히 검토를 못 한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 부분은 내지 않았고, 저희는 청소년 주무 부처니까 청소년 자살률과 관련된 그런 대책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습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한 10명 정도가 해당되고 OECD는 6.4명 정도가 되지요.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정신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짤 때 우리 여가부는 청소년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근본 처방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국정에서 놓치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시니컬하게 말하면 코미디 같은 정책이 반영됐다고 보여지는데, 여가부에서는 이런 실수는 없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그런 대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범부처가 함께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여기서 하나 우리 여가부가 보건복지부 쪽에 얘기를 했으면 좋은 게, 고위기청소년 집중클리닉 시범사업을 2년간 했고 지금 전국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효과도 자살 위험의 31%, 자해 위험성의 42%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좀 더 청소년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처방을 보건복지부하고 공유를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정말 번개탄만 없애면 자살이 감소한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 룸카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21년의 정부 단속에서 140건 정도 걸렸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22년 정부·지자체·경찰 합동단속 룸카페 적발 건수 14건입니다. 그리고 조치도 시정명령 조치거든요. 시정명령 조치라는 게 뭐냐 하면 출입 및 고용 금지 안내표시 미부착에 대한 시정조치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뒷북행정 하지 말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변종으로 나타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이나 지자체에게 미리 사전 단속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제가 아까 여가부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마지막 장관이 아니라 정말 여가부의 위상을 드높이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조치들을 실제 선제적으로 제대로 해내면 저는 그렇게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본회의 이후에 우리 여가부장관님께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사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여가부장관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부가 위상을 갖고 나아가는 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사퇴 의사도 있지만 저는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감을 표하면서 전체 통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적절한 방식과 시간을 갖고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 장관님, 우리 사회의 근간이 가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출산율을 논외로 치더라도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럼요.

○최승재 위원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가부 예산 계획안 중에 보면 세출 관련 주요 사업비에 변화가 있는데, 특히 가족정책 예산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여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가족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됐는데요, 위원님.

○최승재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13% 증액했습니다.

○최승재 위원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신청 서류가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업들이 왜 해당 제도에 신청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활용 회신도 상당히 저조하고요. 신청 기업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는지 부분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대되고 그다음에 좀 더 권장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올해부터는 가족친화 최고기업도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인증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기업이 됐을 때 인센티브도 받고 또 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청 서류에 선호 인센티브를 추가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안 된 것은 인증 신청이 작년 8월 3일에 3차로 공고가 끝나서 작년에 못 했고, 올해는 기업이 신청하는 단계부터 인센티브 활용 사항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조사해서 그중에서 신청 서류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가족친화 최고기업은 제가 취임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15년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꾸준히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된 기업들은 최고기업이라는 네임 밸류를 주는데 그분들의 역할도, 저희가 좀 더 많은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도 저희가 메뉴를 만들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대출 시

금리 우대라든가 조달청 물품 구매할 때 가산점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인센티브가 뭔지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넓혀 가서…… 이게 제도가 꽤 오래되어서 이제 확실히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많이 발전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보겠는데요.

육아휴가에 대해서 남성들을 의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노르웨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노르웨이가 480일의 육아휴직을 받는 것 중에서 60일을 반드시 한쪽 성이, 그러니까 아빠든 엄마든 누가 반드시 써서 강제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워낙, 0.78명으로 합계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다양한 방식을 저희가 고민하는데,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소득대체율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르웨이식으로 육아휴직의 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부모가 다 육아휴직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승재 위원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겠고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혁신적으로 된다면, 사실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육아라는 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한 어떤 당연한 권리 그다음에 급여 그다음에 평등 이런 부분들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고정적인 관념 때문에, 남성만 바깥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여성은 혼자 육아만 하는 그런 쪽으로 사실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도입을 시킨다면 나머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지 아빠에게도 혜택을 준다 이런 것보다 돌봄은 둘 다 하는 것이다, 부모가 다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승재 위원 여가부에서 강력하게 주장 한번

해 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육아휴직 급여를…… 그래서 지금 가족친화 최고기업들에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메뉴 중에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아니면 아빠에게도 강제 할당하는 것들을 일단은 대개 자발적으로 가족친화 최고기업에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최고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메뉴 중의 하나로 저희가 제시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장관님, 1차 질의 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현안질의가 아니고 장관님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질의가 아닌 발언을 해서 제가 보기에 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글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하라는 뜻으로 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좀 과한 측면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9개월 넘게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이 여성·청소년·가족의 기능을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는 21세기에 적합한 모형을 굉장히 저는 노력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행안부랑 어렵게 협상을 해서 만들어 낸 건데 그 부분을 여성 지우기로 연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가부 조직 개편과 여가부의 업무 두 개를 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업무가 많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 방안, 청소년들을 어떻게 자살·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안팎이 더 넓은 학교로 함께하는 그런 정책들을 쪽 냈고 그다음에 가족센터의 기능도 1인가구에 대해서 추가하고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출현에 발맞추어서 다양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올해는 경활(경제활동),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률을 높이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뜻을 담고 쓰신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굉장히 무기력하다든가 무능하다든가 비겁하다든가 무책임하다든가 그런 식의 표현으로 여성가족부나……저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그래도 조금 받아들이 수 있지만 여성가족부를 그렇게 폄훼하시는 것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라면 하시기 않아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그 결정을 따르고 여성가족부가 존속되는 동안은 여성·가족·청소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저한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께서도 저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장관님, 제가 보면 여성가족부에 있는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무슨 죄냐 이런 생각도 들고, 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타협을 못하고 협상을 못 해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여야의 기 싸움처럼 돼서 사실상 여성가족부 직원들의 사기를 많이 꺾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들께서 장관님께 심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여성가족부가 좀 더 목소리를 내 주기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그것을, 너무 그런 심정이다 보니까 표현이 과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여가부 개편 그 안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할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것은 어떤 건지, 다음에 장관님께 확실한 기회가, 역할이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하고 싶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와서 청소년이나 가족 업무는 지금 상당한 부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 파트에서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의 지위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남성과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수준도 격차가 있고 임금격차가 OECD에서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는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굉장히 하고 싶고 또한 국회로 대변되지만 정치적 대표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은희 위원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 권인숙 1분만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젊은 층에서는 여성이 충분히 약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좀 연세가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직 여성이, 상장 법인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특히 민간 부분에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인 임파워먼트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리더십, 정치적인 대표성에서 여성이 많이 진출했을 때 보이스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조은희 위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위원의 의견은요 보건복지부 밑에 본부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조금, 여성가족부가 기능이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장관님, 작년에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 개선 이런 게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은 어머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계신 그런 상태가 아닐 때 미혼부도 출생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 절차를 굉장히 당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여가부도 관계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물론 관계돼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양육비 신속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1년에 몇천 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혁신 사례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중에, 그중에서도 규제혁신 부문에서 여가부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역시 여가부가 C등급, 최하위를 받았는데 아까 용혜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로는, 이유가 무엇이나에 대해서 규제개혁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두 가지 항목에서 저희가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하나가 규제혁신이었고 또 하나가 주요 정책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규제혁신이 다른 부처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제출해서 여성가족부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국조실에 여쭙했을 때 규제혁신 미흡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뒤에 계신 분들이 여가부가 C등급 받은 이유를 찾아서 막 앞으로 전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C등급 받은 기관이 네 군데밖에 없는데 장관급 기관 중에 권익위, 방통위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라 그렇다 치고 실제로 정부 부처 중에는 여가부가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행안부나 외교 관련해서 해임건의안까지 문제됐던 외교부 이런 데가 B등급인데 여가부가 C등급까지 받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거든요,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아야 될 정도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정책하고 규제혁신 여기서 다 C등급을 받으셨는데 이게 각각 100점 중에 50점하고 20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요 정책 50점짜리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아동·청소년 자살 문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을 하면

서 특히 12~14세의 청소년 자살률이 2020년 3.2명에서 2021년 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전년도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통계를 보고 2022년에 잘했는지를 평가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들어 갖고 그것이 증가한 게 마치 여가부의 정책 대응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2022년 자살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전체 자살률은 이천이십…… 최근 것은 11.1명입니다. 청소년 전체는 11.1명인데요.

○김한규 위원 아니요. 2022년 자료가 벌써 다 나왔습니까, 통계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요. 없고, 2021년 자료가 11.1명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 업무를 잘했는지 수치로 평가하기에는 지금 이른 상황이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9월에 나오니까, 올해 9월에. 그런데 마치 보고서를 보면 교묘하게 이렇게 자살률 통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여가부가 결과적으로 일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규제혁신 C등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다른 부서들이 더 많은 것을 냈다고 하는데 여가부 말고도 복지부, 법무부도 같이 이 일에 관여했는데 다른 데들은 B등급을 받고 여가부만 C등급을 받았거든요.

저는 장관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규제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부족해서 C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대통령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여가부가 A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폐지하겠습니까. 명분이 없지요.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도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가부장관이나 여가부 직원들한테는 당신네 직장을 없애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다음에 폐지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냥 예정된 대로 C등급을 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논의 때문에 여가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아야 될 분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주요 정책에서 C등급 받은 청소년 자살 관련된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저도 1분만 주시면……

○위원장 권인숙 예.

○김한규 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청소년정책관의 문제입니까? 이분들 업무 능력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분들 징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C등급 받은 데 직접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전혀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작년에 굉장히 매우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마지막에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되게 바쁘게 두 가지 업무를 다 하신 것이지요. 조직 개편하고 원래 업무를 다 하시느라고 장관님은 특히 더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조직 개편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여야 간의 협상에 따라서. 그러면 계시는 동안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가족 정책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버팀목을 대는 게 저는 장관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이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C등급을 다시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작년에는 오히려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쓰고 힘들었던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에서 아까 미혼부 관련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소관으로 돼 있어서…… 다른 부처는 부처가 크다 보니까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많고 저희는 부처가 조금 규모는 작다 보니까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섣다운제가 없어졌을 때도 저희가 평가를 우수를 받지 못했고, 그때도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규제개혁에서. 그래서 그런 부처 간의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자살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작년에 저희가 또 대책을 냈습니다. 대책을 내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21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데이터로 저희가 평가를 받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정부 평가에 대해서 일회일비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는 여성가족부 원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해로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예정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장관님, 이번 21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김태년 의원님이 내신 법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희 위원 예. 알고 계시네요.

2020년 7월에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그게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당론 법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그런데 개정안 제37조제1항을 보시면 국회 문체위에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을 추가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 여가위를 폐지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권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정주 간사님, 양이원영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까지 총 아홉 분의 여가위원께서 국회 여가위 폐지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김한규 위원님께서서는 나중에 보궐선거로 들어 오셨기 때문에 안 계십니다마는.

장관님, 겸임 상임위원 국회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가부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여가위는 폐지해라, 그러나 여가부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민주당의 논리인 것이지요. 이게 과연 납득이 가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글썄,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경희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내 여성정책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만약에 여성정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국회 여가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여가위를 국회의 단독 상임위로 격상하자고 주장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성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은 저도 여가부 조직 개편을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희 위원 저는 여가위 폐지를 외치면서 동시에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로남불이자 이중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국감에서 제가 여가부의 영문 명칭을……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젠더 이퀄리티, 즉 양성평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 인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남녀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지향하자는 데 있습니다.

장관님, 모든 정부 부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정경희 위원 특별하게 여성만을 보호한다는 전제 자체가 이미 불평등이고 현재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처가 없는 것이야말로 성차별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저희가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희 위원 지난 정부의 여가부는 여성의 편에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정권 눈치만 보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추악한 성추행 사건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했어요. 오히려 이정옥 전 여가부장은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아서 여가부 공무원들조차 부끄럽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했

던 지난 문재인 정부 여가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는커녕 존재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회 문체위에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를 추가하고 국회 여가위를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나 보건복지부 등에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를 추가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젠더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잘 이루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서 저희가 할 역할을 하고 장관님께서도 소관 기관장으로서 또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회와 여가부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경희 위원**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말씀처럼 여가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서 이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야 되지만 저는 국회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논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는, 오늘 벌써 룸카페 얘기라든가 청소년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는 본연의 업무를 더 강화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

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경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까 제가 장관님한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희 위원님과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거의 다 대부분 얘기는 됐고 조금……

제가 국회를 존중합니다. 저도 한때 국회의원 이었고 국회를 매우 존중하는데 국회에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심의를 받고 심사를 받고 예산이나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상호존중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성가족부나…… 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제가 좀 그래도 견뎌 낼 수 있지만 우리 부의 공무원분들이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표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한 표현 같은 것들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어쨌든 저희가 서로 기능은 좀 다르지만 함께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수장인 장관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마지막으로 유정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주 위원** 장관님, 앞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제15차 양평위에 보고한 국가성평등지수가 기존 지표로 측정한 지수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씀했는데 알아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아봤는데요. 국가성평등지수 결과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개편된 지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간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기존의 지수를 사용해서 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이게 그 보고서이고 제가 아까 사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장관님, 다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매주 수요일 종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 중심으로 수요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그런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장관이 된 다음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렇다면 이제 좀 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눈으로 목격하시면 놀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PPT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모독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고 있어요. 또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인권침해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차관님도 마찬가지로 꼭 가 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94세로 고령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일이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서 권리 피해를 구제하고 사실을 바로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딱 상상만 해 봐도요.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위안부 역사 부정 또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봤는데 ‘여가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폄훼 방지를 통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라고는 하셨습니다. 장관님,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렇죠.

○유정주 위원 그런데 추가로 여성가족부에서 한 가지 또 제안을 주셨어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과 같이 처벌 예외규정에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 행위 이외에 언론 보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수용 의견을 전달해 주셨어요. 장관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저도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유정주 위원 그렇다면 장관님,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해 주신 의견과 같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처벌 예외규정에 언론 보도를 추가하면 장관님도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바로 세우고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이것 정말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르치고 또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약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기 위해서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민의힘 여러분들께도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도, 여성가족부와 장관님께도 부디 이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했고요.

이왕 위안부 피해자분들 말씀이 나와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민의의 정당이라는 우리 국회에서 소위 약자라고 불리고 소수자라 불리는 분들에게 대한 지독한 편견이 섞인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장관님,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런 느낌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소수자나 이런, 그들이 들었을 때 심장에 칼이 꽂히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편견 섞인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상임위에 서요. 그러한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적시해 주시면……

○유정주 위원 오늘도 나온 이야기이고 지난번에도 나왔는데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억은 하실 겁니다. 담배에 비유되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장관님의 의견을 제대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요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소수자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차별받거나 박대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아까 법원 2심에서 나왔던, 동성애 대해서 판사가 말씀하셨던 고법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민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법제화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지 소수자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동등한 사람으로서 인권에 대해서 박해를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취급받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유정주 위원** 장관님,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할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2차 질의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

3차 질의 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시군요.

오늘 일정을 마치기 전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인공 정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유정주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요. 아까 장관님이 질의에 대해서…… 이런 질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게 성교육 위탁 사업을 지정하는 데 결격 사유냐’라는 질문에 장관께서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겁니까? 아까 유정주 위원님 질문에서는 차별이라든가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식의 발언이나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두 얘기가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마지막 드렸던 말씀, 어떤 한 사람의 휴먼 빙(human being),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혼이나 성소수자가 법적인 개념 안에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성교육 위탁사업 이것은 청소년 교육이고 어린이 교육인데요, 그 교육 속에서 사실은 법적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권과 자존감을 지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존재는 부정하고 그 존재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교육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차별과 혐오를 낳는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

시키느냐라는 것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결정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교육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위탁사업에서 배제될 수 없는, 배제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더, 특히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인숙** 교육에서 이 사람들,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네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권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아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권인숙** 아니지요. 아까는 굉장히 명확한 상황이었습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까 재판부의 판결문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다.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존중한다고 하면서 가장 일차원적이고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청소년 교육, 아이들의 교육에서 배타적이고 누군가를 부정하고 이런 교육이 배제돼서는, 배제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배제…… 말이 꼬이는데요. 배제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의 발언은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한 조심스러운 발언 수준을 넘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정도에서는 선을 지켜 주셔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위원장 권인숙** 교육에서는 차별이 없어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위원장 권인숙**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자살률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바이트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보면 성소수자 청소년 자살률은 비성소수자 청소년보다 5배 높다고

하고 똑같은 통계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과 자기 존중심과 남에 대한 존중심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폭력, 굉장히 많은 학교폭력이라든가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교육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좋은 환경과 좋은 청소년의 삶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도 된다는 의식이 끼어들지 않도록 장관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청소년 문제를 다룬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쉬운 답변들, 굉장히 염려되고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도 조금 얘기를 보태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동시에 교육의 내용은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도 있고 학생 자체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액 체험이라는 그것도 제가 내용을 그때 알아봤었는데 그게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게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들의 우려를 일으켜서 문제가 된 겁니다.

청소년에게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인권의 감수성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 나이에 맞는, 제가 보기에는 눈높이에 맞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정경희 간사님이 우려를 전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소수자 모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돼야 되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인숙 그 얘기는 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동성애와……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지요.

○정경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따로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질의 내용 속에 포함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질의를 지금 다 마무리하는데……

○위원장 권인숙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게 성교육 위탁사업을 지정하는 데 결격 사유냐’는 질문에 장관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정경희 위원 위원장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과 질의응답이 다 끝났는데 왜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코멘트를 하십니까?

○위원장 권인숙 이 부분은 제 의사를 반영한 거고요.

○정경희 위원 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계신 거예요, 사후적으로.

○위원장 권인숙 위원장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저희가 꼭 짚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장관님과 나누어야 될 얘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정경희 위원 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을 마치 무슨…… 질의도 아니고 위원장님의 클로징 멘트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위원회의 정당한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인숙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서면질의가 빠졌답니. 조은희 위원님까지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김현숙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권인숙	김선교	김한규	양이원영
용혜인	위성곤	유정주	이소영
이원택	장경태	전주혜	정경희
조은희	최승재	최연숙	한준호
홍정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입법심의관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차관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박난숙
여성정책국장	김종미
권익증진국장	최성지
대변인	조민경
정책기획관	김가로
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가족정책관	김숙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금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직무대행	변주연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한준호·기동민·김남국·김민철·김병욱·김정호·박상혁·서삼석·안민석·유정주·이상현·장철민·전해철·조승래·최종윤 의원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윤준병·민형배·이성만·김성환·장철민·변재일·오영환·김철민·신정훈·

김태년·한병도·양경숙·김정호·민병덕·기동민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안민석·권인숙·김홍걸·도종환·문진석·민형배·서영석·조승래·조오섭·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5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9. 이형석·문진석·조오섭·송갑석·민형배·양향자·이용빈·이병훈·윤후덕·이성만 의원 발의)

11월 30일 회부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2. 5. 홍석준·김예지·김상훈·박덕흠·김태호·지성호·최재형·권성동·박정하·하태경·金炳旭·한무경 의원 발의)

12월 6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2. 12. 6. 박찬대·김상희·김의겸·문정복·신동근·신영대·유동수·이성만·임호선·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12월 7일 회부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권인숙·권칠승·민형배·신정훈·용혜인·유정주·이성만·정춘숙·최강욱·최혜영·한정애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권인숙·권칠승·민형배·신정훈·용혜인·유정주·이성만·정춘숙·최강욱·최혜영·한정애 의원 발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권인숙·권칠승·김정호·민형배·신정훈·유정주·이성만·정춘숙·최혜영·한정애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윤후덕·김경협·김정호·송갑석·이동주·이원욱·이형석·임종성·최기상·

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2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최춘식·하영제·박대수·하태경·
윤주경·구자근·최승재·전주혜·한기호·
김성원 의원 발의)

12월 16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0. 김영주·강득구·강준현·고민정·
김승남·송옥주·이수진(비)·이원욱·정태호·
한정애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0. 권인숙·김상희·김용민·서동용·
유정주·이원욱·정춘숙·최혜영·한정애·
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1일 회부됨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3. 조은희·박정하·최승재·박성민·
김상훈·한무경·신원식·이태규·정경희·
성일종 의원 발의)

12월 26일 회부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22. 12. 26. 소병훈·이병훈·강민정·김주영·
인재근·남인순·김남국·양향자·김민석·
김두관·양정숙·여기구 의원 발의)

12월 27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 5. 이병훈·김민철·김주영·김철민·
소병철·양정숙·오영환·이개호·이상현·
전재수·전혜숙·정성호 의원 발의)

1월 6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 16. 소병훈·김남국·김두관·김민석·
김병욱·양향자·여기구·인재근·임종성·
홍정민 의원 발의)

1월 17일 회부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유정주·김용민·김윤덕·김정호·
신동근·유기홍·윤영찬·이학영·장경태·
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박진·김상훈·김석기·김승수·
김정재·김희곤·박덕흠·엄태영·임이자·
정우택·주호영·태영호·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9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 27. 민형배·황운하·이용빈·문정복·
박상혁·양정숙·강득구·최종윤·도종환·
김홍걸·김두관·윤미향 의원 발의)

1월 30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

(2023. 1. 30. 최연숙·김상훈·정우택·임병헌·
김석기·박대출·이태규·조명희·최영희·
최승재 의원 발의)

1월 31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3. 2. 6. 박주민·김정호·김홍걸·최강욱·
한준호·강민정·유정주·김승원·김민석·
정태호·김한규 의원 발의)

2월 7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2. 8. 김용민·정태호·이동주·최강욱·
이용선·문진석·황운하·민형배·이수진·
김두관·한준호·강민정 의원 발의)

2월 9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2. 17. 백혜련·인재근·홍영표·류호정·
정성호·김상희·윤관석·최종윤·강준현·
김영진 의원 발의)

2월 20일 회부됨

○**계획서 송부**

2023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2023. 1. 30. 정부 제출)

1월 30일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공 포 번 호	행 정 입 법 명	소 관 부 처	구 분
제33132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시행령
제184호	인신미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시행규칙
제18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시행규칙